

‘민주 당권 누구에게’...광주·전남 표심 ‘주목’

호남 대안론 송영길·SK계 김진표·대세론 이해찬 ‘빅마우스’ 지역위원장·단체장 지지 성향 ‘촉각’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세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의원과 호남호보 대안론을 내세우는 송영길 의원, SK계(정세균계)의 조직력을 앞세운 김진표 의원 중 누가 당 심장부의 지지를 받고 당권을 거머쥘지 주목된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5일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국민 여론조사 10%, 당원 여론

조사 5%를 각각 반영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권주자들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지역위원장과 단체장의 지지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지역 8개 지역위원장 중 이형석 광주 북구위원장, 이해찬 의원을, 이용빈 광산갑위원장은 송영길 의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강기정 북갑위원장은 김진표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계의 강 위원장이 젊은 호남출신 주자인 송 의원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송갑석 서갑위원장은 송 의원과 동향이라는 점이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낙마한 최재성 의원을 지지했던 양향자 광주 서구위원장은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영호 동남갑위원장은 이해찬 의원쪽 지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송 의원쪽으로 분류되고 있다. 광산은 민형배 위원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동남을 이병훈 위원장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각각 자리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를 옮기면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을 지지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표면상으로 는 중립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시장쪽의 경우 일부 조직이 이해찬 의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기종 목포위원장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한술밥’을 먹은 김진표 의원쪽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신정훈 나주·화순위원장은 이해찬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계인 구충근 화순군수와 류근기 곡성군수는 김진표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의원측은 전동평 영암군수와 김준성 영광군수, 김산 무안군수, 강인규 나주시장을, 송영길 의원측은 김철우 보성군수, 허석 순천시장을 각각 자신의 편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대세론과 호남대안론, 조직력 등이 얽히고 설기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정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지지성향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원의지역위원장이 많다는 점에서 밑바닥 민심이 대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정가브리핑

천정배 “이제 민주당 응답할 차례”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 승자독식 구조 바꿔야”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을)은 8일 선거구제도와 관련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카톡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대통령의 이런 뜻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저는 오랫동안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도입을 주창해 왔으며, 여야 정당들의 초당적 모임인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 연대’도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선거제 개혁의 적기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모든 야당도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 “심대한 민의의 왜곡을 가



저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실행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모든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미래당 박주현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현실성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김병준에 “선거제 개혁 우당되자”

김병준 “정치혁신에 관심 안 둘 수 없어” 화답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평화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우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김 위원장을 예방해 “(김 위원장께서) 선거제 개혁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30년 전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꿔 전두환 체제를 극복했듯이 이제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신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5당 연대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김 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업적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치가 기업으로 얘기하면 공정과 공정문제가 굉장히 잘못됐다. 공장이 잘못되니 좋은 정책과 인물이 안 나오는 양상”이라며 “저도 당 개혁에 1차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정치혁신, 선거제 개혁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다”고 화답했다. 그는 “비대위 아래 시스템 정치혁신 소위에서 선거구제까지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야 “은산분리 완화... ‘영수증 처리’ 특활비 양성화”

에너지특위서 전기요금 체계 논의...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 7명 구성

여야는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자본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개선책과 관련해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특활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폭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8월에 처리하기로 했고,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

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급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자본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혁신 관련법도 가능하면 여야 협의를 거쳐 8월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명성과 양성화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제도 개선안도 나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중 상당부분은 이미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증빙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올해 특활비 예산 중) 영수증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는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기타운영비·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 7명(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의원 국

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은 뜻을 모았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니 누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등도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 문제 등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뿐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주자들, 전대 경선후원금 모금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의 경선후원금 모금경쟁도 절정에 달하고 있다. 송 후보와 이 후보는 이달 초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일찌감치 채워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추가모금까지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경선기간 총 1억5,000만원까지 별도의 계좌로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8일 “경선 후원계좌 한도액이 다 찼다면 개인 후원모금액을 경선계좌로 이체해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후원모금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최소 억단위의 비용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리당원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1통을 보내는 데만 약 2,000만원이 드는 고비용 구조를 들어 전당대회가 ‘쩐의전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당권도전 12명... ‘안심vs유심’ 마케팅

오늘까지 후보등록...11일 컷오프 통해 후보 6명 압축

바른미래당 최대주주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일선에서 후퇴한 뒤 열리는 9·2 전당대회에 총 1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두 큰손 모두 “전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당 출신 후보들

은 ‘안심’, 바른정당 출신 후보들은 ‘유심’이 각각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안철수·유승민 마케팅이다. 바른미래당은 8~9일 이틀간 전대 후보등록을 받는다. 출사표를 던진 현역의원은 하태경·

정운천·신용현·김수민 등 4명이며, 순학규 전 삼일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환·장성민·권은희 전 의원, 이수봉 전 인천시장 공동위원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 허점도 전 김해시장 후보, 이준석 전 노원병 지역위원장 등 8

명도 당권에 도전장을 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며, 선거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에, 2~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에 오른다. 바른미래당은 10일 후보자 정견발표를 한 뒤 11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해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여성 최다득표자가 컷오프 기준인 6위 안에 들지 못해도 6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